

“노동자 책임만 묻는 안전관리, 철강산업 안전한가” 금속노조,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연구 발표 ... “원·하청 노사 같이 산보위 강화해야”



금속노조가 철강산업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원·하청이 함께 책임지는 ‘노동자 중심 안전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토론회’를 열었다.

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모든 사업장 노동자·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는 조항을 넣었다”며 “오늘 토론회가 철강업종 노동자들의 안전시스템 대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 조사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대제철 단체협약을 보면 노조의 사고조사위원회 참여가 명시돼 있지만, 사고조사위원회는 최초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의 최종 검토 단계에서 작동되다 보니, 노조의 역할도 검토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업무 절차상 최초 보고서는 ‘현업’에서 작성하며, 노조의 참여는 명시돼 있지 않다.

김 교수는 “사고 조사는 초기 목격자 진술과 현장 조사 단계에서 노조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며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노조와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중 5건의 특별산업안전보건위원회(특별 산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로 인한 특별 산보위 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 대신 사고 경위를 기술하거나 사고 경위조차 없는 사례도 있었다.

김 교수는 “사고 원인이 누락됐다는 것은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기술적 대책에만 치우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재해 운동이나 산재 은폐 관행이 깊은 사업장일수록 사고 원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생략되기 쉬우며, 이는 재해자 과실로 책임을 돌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청 노동자에게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위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의 중대 재해와 관련해 특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서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은 ‘원·하청 간 협력을 통한 위험 요인 발굴’ 보다는 ‘원청의 하청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교수는 “위험 작업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에 취약한 노동자를 선별·통제하려는 대책”이라며 “하청노동자를 건강 기준으로 분류하고 선별하는 제도는, 결국 위험한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의 노동자만 남기고 나머지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 산보위에 하청노동자와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별도 원·하청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고조사위원회에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용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현장 발언에서 사용자가 재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온전한 노조법 2·3조! 모두의 노조할 권리! 노동법 개정!

2025 세계노동절대회

5월1일(목) 오후 전국동시다발
*중앙대회(수도권) 14:30 승례문

도시	시간	장소
서울·인천·경기	14:30	세종대로 승례문 앞
충남	11:00	천안터미널
강원	14:00	남춘천역
충북	14:00	충북도청 인근
대전	11:00	대전시청 남문
전북	14:00	전주객사 앞
광주	14:00	광주광역시청 앞
전남	14:00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뒷편
대구	15:00	국채보상로 공평네거리
경북	14:00	포항 협력회관 앞
울산	14:00	남구 변영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경남	14:30	창원 최윤덕 장군상
부산	14:00	전포대로
제주	10:00	제주시청

Below the banner, a large crowd of people is shown holding red and white protest signs that read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Revise Labor Law Articles 2 and 3!).

임용섭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광양)은 “포스코 SRC ‘10대 안전 철칙’에는 ‘작업 전 TBM 작업 중 지적 확인’이라는 악랄한 조항이 있다”며 “사측은 해당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작

업 전 노동자의 지적 확인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미이행 시 안전보고서에 ‘지적 확인 미 실시’로 기록해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라고 비판했다.